

[보도자료]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 관용적, 그러나 낙관은 일러"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이 선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58, 이메일: yskim@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내외 6개 기관 협동연구 결과 종합발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호주 울릉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장 동료, 교우와 교사,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인들, EU회원국 시민에 비해 이주민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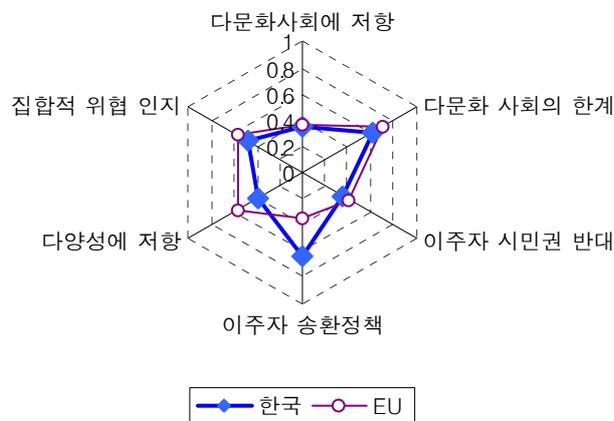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며 혈통 중심적 국민정체성 의식도 기대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 회원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주민

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 태도 형성 초기 단계의 ‘(막연히) 좋은 사람이고 싶어!’ 현상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이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해 한국사회가 긍정적인 지향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적 결론이다.

한국인들은 이상의 몇몇 측면에서는 관용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EU에서 사용하는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척도 가운데서도 다양성 수용능력의 한계나 이주민 본국 송환 등에 대해서는 EU회원국가 국민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배제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종족적 배제주의: 한국-EU 비교 (평균값 기준)

오히려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에 있어 현재 한국사회가 보이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체적 의제별로 태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 수준과 논의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에 관한 의제가 발굴되기 시작하고 관심과 논의가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서 일반국민들 역시 몇몇 사안을 중심으로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을 뿐,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라기보다는 이주민이 현저히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 향후 난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유럽 각국과 호주 등의 인종관련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이주민에 대한 일반시민의 태도는 개개인의 경험이나 구체적 사건에 의해 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 긴밀히 접촉한 경험이 적고 사회적으로도 인종·민족문제로 인한 갈등이 본격화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다소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한국에서 이주자 문제는 주로 인권침해나 소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자가 다수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없다는 점도 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인의 표면적인 관용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

[보도자료]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 야누스의 얼굴"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이 선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58, 이메일: yskim@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호주 울롱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장 동료, 교우와 교사,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 태도의 이면, 국민으로서의 수용 "NO"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거부감이 없지만, 혈연이나 가족관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저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인 '시민'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집단(in-group)에 가까운 관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만큼 외국인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수용성으로는 이주민을 친구나 이웃, 동료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에 적합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예측이다.

◇ 선진국 출신자와 개도국 출신자에 전혀 다른 얼굴 내보여, 개도국 출신자에 대한 민족적 편견 비화 우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수용 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출신인가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 출신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사회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향후 사회 변화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저연령,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드러나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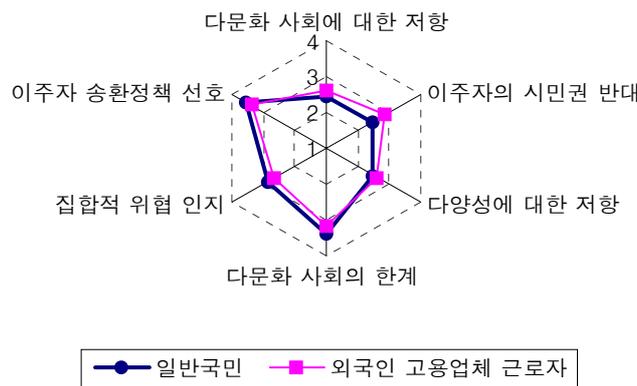
◇ '도와줘야 한다'는 '선의'가 오히려 부담감 부추길 우려

사회 일각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이주민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선의'로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태도 역시 현재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자칫 이주자를 일방적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선

입견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주체로서 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 이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이들의 태도가 더욱 부정적, 자연적 태도 개선 기대하기 힘들어

이주민과 개인적 친분관계 맺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이들과 유사하거나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를 지역주민으로 대하는 이들이나, 국제결혼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학생 또는 교우로 대하는 이들 역시 이주민을 완벽한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일반인 보다 오히려 크게 느끼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나 시민권 보장에 대해서도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국민과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자의 태도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

[보도자료]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태도, 부정적 선회 가능성 대비 해야 할 시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gml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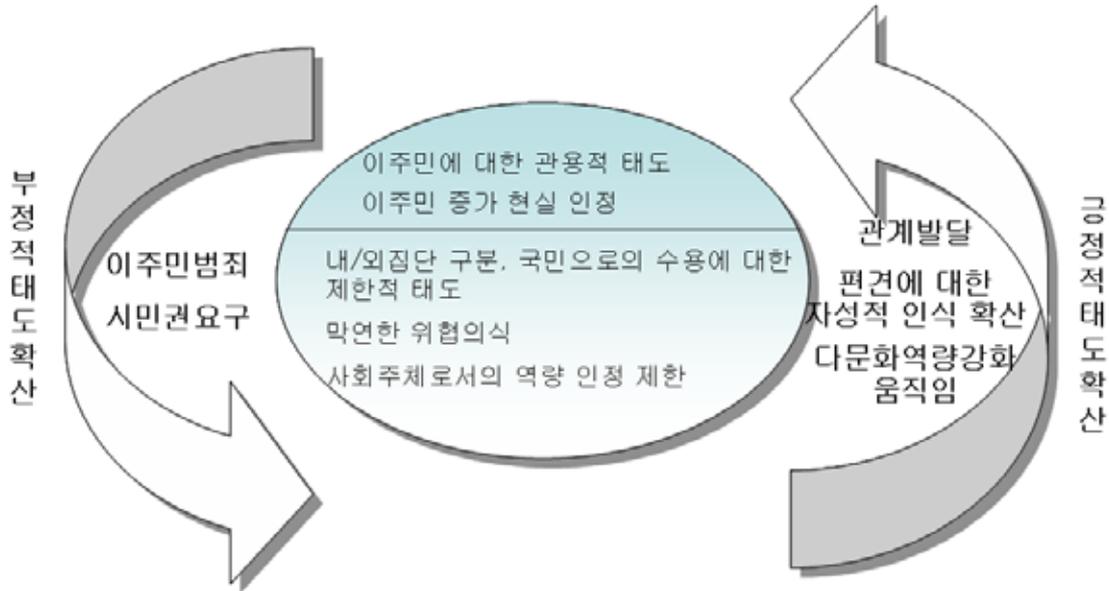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이 선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58, 이메일: yskim@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호주 울롱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작업장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업장 동료, 교우와 교사, 지역주민과 정책·서비스 담당자들의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전망>



◇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 태도 향방 매우 유동적

그간 한국에서 이주민 문제는 주로 인권침해나 소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민이 다수자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수용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만약 이러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인의 표면적인 관용성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주민에 대한 집합적 위협의식, 사회적 촉매자의 부재 ... 부정적 선회 우려 커

이주민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경우 이들을 향한 부정적 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민권이나 사

회 참여에 대한 이주자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견 관용적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예측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 촉매자(social facilitator)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긍정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긍정적 전개 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 필수

다른 한편,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열쇠는 한국인들과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 사이에 개인적,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면서 이주민을 사회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전되는 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자성적 인식이 확산되는데 달려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주민과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와 관계를 발전시켜갈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쌓아가야 하며, 사회단체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 이주민 적응 지원 중심의 정부 정책, 전면적 개편 필요

이러한 견지에서 연구진은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의 이주민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부 정책의 틀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다양성·사회통합 정책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도입, 선진국 정책의 핵심인 시민적 통합 증진 정책, 다문화 시민교육의 본격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